

與 朝鮮, ‘임·박·노’ 중 1명 이상 지명철회 靑에 요구

“국민 눈높이 맞춰야” 공개 반기 지도부, 당내 의견 청에 전달키로 靑 “당 요구 적극 검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들이 12일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한 임해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다음날 공개 반기를 든 행국이다.

이에 청와대 당초 임명 강행에서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흐름으로 돌아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4일까지 당·청이 합의점을 찾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간사인 고영민 의원이 밝혔다. 고 의원은 “보고서 채택은 어떤 형태로든 돼야 한다”며 “국

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한 명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권자의 권한을 존중해 부적격 대상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80여명의 조선의원 중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지는 의견에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모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쌓여 온 평가를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구는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이 적극적으로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조선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청와대에도 여러 집약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오는 14일

이전 청와대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여러 의견이 모이면 당의 분명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기류도 당초 임명 강행에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결국 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당·청 갈등을 넘어 여권의 분열로 정권재창출이라는 공동 목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당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14일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결국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1명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으로 인사 청문회 정국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논란이



부동산 관련 대화하는 송영길-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1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다 해도 인사청문 정국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중 첫 대선 출마 선언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 선언한 것은 양 지사가 처음이다.

양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공정과 평등을 바탕으로 촛불혁명으로 성공했고,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며 “K-방역은 국제 사회의 표준이 됐고, 방탄소년단·윤여정·김연아 등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청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신을 흡수저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3대 위기 즉,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도, 도약하기도 어렵다”며 “주거와 교

육·의료 등 필수적인 사회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고비용·저생산·저수익 사회에서 저비용·상생 사회로 가야 한다”며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며 철도가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3대 위기 극복 해법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연간 20만채씩 15년 동안 300만채를 건설하고,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독거노인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청 신설도 제안했다.

양 지사는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도 완성하고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박·노’ 최종 조율 할까

문재인 대통령 14일 민주 지도부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11일 전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신임 당 지도부와 의 상견례 성격이지만, 청문 정국 해법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간다면 청와대 회동에서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까지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거론하고 있어 재송부 가능성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이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당일 청와대 회동에서 장관 인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 늦다”며 “당·청 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져 14일 회동이 청문 정국을 넘어서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은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상수원관리지역



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가구수는 9,500여가구지만, 2020년 6,500여가구로 크게 줄었다”면서 “시행령으로 불합리하게 축소된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삼석, ‘농산물 부산물 퇴비 재활용 법률’ 개정안 발의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원활하게 재활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2일 이런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사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0kg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보아 지자체에서 수거하지만 300kg 이상은 본인 책임하에 법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신고한 후 처리해



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영세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써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판사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